

‘청와대 개편 후 개각’ 공식 이어지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레 개각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 개편 후 개각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비서진 개편은 인적 쇄신을 통해 첨예된 분위기를 다지고 정책 집행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내각(內閣) 교체와 성격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반드시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모진 개편을 먼저 단행한 뒤 개각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아오곤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6일 자치발전(민형배)·시민참여(정현곤)·사회조정(강문태)·제도개혁(김우영)·정책조정(김명배)·자영업(인태연) 비서관 등을 교체한 뒤, 한달 만에 5개 정부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청와대가 당시 내세웠던 ‘심기 일전과 정책 성과 체감 구현’이라는 개각의 키워드는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이뤄졌던 청와대 개편과 이어지는 개각 패턴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오는 5월 무렵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시점이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 이르면 2월 설 연휴 전후로 개각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개각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여왔다. 검증 여부가 개각 시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을 후보자의

지난해 8월 비서관 교체, 한 달 내 중폭 개각 단행

1기 내각 때 의원 입각한 4명 개각 대상 꾸준 거론

당초 5월 전망…시기 당겨져 2월 설연휴 전후 관측

인사 검증 진행중…입각 대상 총선 불출마 조건 등



임종식 비서실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신임 비서실장 등 인사를 발표한 후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우선 조건으로 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거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며 빌탁 배경을 언급한 바 있다.

우선 교체 대상으로는 1기 내각에서 의원 입각한 장관이 거론된다.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은 교체가 유력하다. 1기 내각으로 1년6개월

이상 임기를 보낸 데다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년 인사 차원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만찬을 가진 것도 개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외에도 의원 입각 사례는 아니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1기 내각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각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개각 대상자로 언급되는 정부 부처는 정관의 부처 장관들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기를 특정할 순 없어도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믿음 인사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적당한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의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그에 대해서는 ‘원팀’(하나의 팀)이 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과 김수현 정책실장 체제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가급적 내각을 빠르게 정비해 경제 성과 창출에 전념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실히 체감케 하고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목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개각과는 무관하게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도 경제 관련 일정들을 이어나간다. 오는 15일 대기업·중견 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주최한다. 경제계 인사 초청 신년회(29일), 종소·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7일) 등 주체별 경제인사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의 일환이다.

또 지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방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지역 경제 투어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김현철 “민주당 탈당한다”…文정부와 견해차 드러내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 를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이날 자신의 페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짚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민주당에 입당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김 상임이사는 남북정책과 경제 정책, 탈원전 문제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견해 차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존망의 문제인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궁극적인 남북통일의 문제를 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협화음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썼다.

“한국당과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의 충돌은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수정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문제도 우리의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이사는 글 말미에 ‘너무 의욕적 으로 일하는 건 좋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 죽근들 뿐 아니라 이당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쌓여있는 여러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애당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심재철 “박근혜 탄핵 당시 뭐했나”

황교안 전대 출마 ‘무혈입성’ 비판

“사족생 결기 있는지 궁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국당 입당 후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박근혜 정권의 최대수혜자인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식 입당 발표 시 입장의 변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리는 것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 역시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고도 했다.”

이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맨주먹으로 싸워나갈 각오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며 “약전고투의 정치판에서 사족생의 결기는 있는지 당원들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전 총리는 11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장을 만나 입당 의사를 밝히고 입당 시기는 당과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다음달 27일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과거 새누리당보다

못하다는 말 들어도 싸” 지적

평화당, 5·18 진상규명위원에 지만원 거론 지적

민주평화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과거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박근혜 정권 하에서 새누리당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최근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놓고 보이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을 진상조사위원회로 추천한다고 했다가 다른 진압군 부대장을 검토한다는 등 오락가락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3년 5·18 북한군 침투설이 제기됐을 때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18 뿐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고 유일호 대변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에 대해

대해 더 이상 용납하면 안되겠다”고 천명했다. 아주 확실한 입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 한국당이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 과감하게 선을 긋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과 천양지차”라며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들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이라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니 안타깝게도 엄동설한에 5월 어머니회에서 지난 11일 상경해 농성에 들어갔고 5월 단체들에서도 금명간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은 하루 빨리 국민이 납득할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하든지 내부사정상 어렵다면 추천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